‘땅투기 의혹’ 수사, 주말도 멈춤 없다…LH 앞선 집회도

지자체·공공기관 투기 의심 23명 내사

합조단 의뢰…국수본 “성역 없이 수사”

LH 투기 수사 속도…대면조사·분석 등

의혹 확대…경찰, 주도적 수사 자신감

경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등 부동산 관련 범죄 의혹 규명에 전력투구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주말에도 관련 수사의뢰 사안을 검토하고 관련 분석에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이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합수본)는 정부합동조사단(합조단) 수사의뢰 대상인 투기 의심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공기관 직원 23명에 대한 내사에 들어갔다.

전날 합조단은 3기 신도시 개발 업무담당자, 지방공기업 관련자에 대한 지구 인접·연접 지역 내 토지 거래 내역 등을 조사, 23명을 투기의심자로 분류하고 수사의뢰 했다.

지자체 소속은 광명 10명, 안산 4명, 시흥 3명, 하남 1명 등 18명으로 집계된다. 지방공기업 별로는 부천도시공사 2명, 경기도시공사 1명, 과천도시공사 1명, 안산도시공사 1명 등 5명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수사의뢰 관련 서류 등을 검토하면서 필요한 경우 관할 시·도경찰청에 배당하거나 직할 부서 차원의 의혹 규명에 나설 전망이다.

국수본 관계자는 “모든 수사력을 집중 투입해 공직자뿐만 아니라 친인척을 포함한 차명거래까지도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며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LH 직원 투기 의혹 수사 또한 속도감 있게 전개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자료 분석과 관련자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전날에는 이른바 ‘강사장’으로 불리는 LH 직원 등 3명을 대면조사 했다.

경기남부청은 지난 9일 LH 본사 등에 대한 첫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관련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7일에는 국토교통부와 금융권 대상 압수수색이 이뤄지기도 했다.

LH 직원 투기 외 부동산 관련 범죄 수사 또한 대대적으로 진행 중이다. 포천시 공무원, 시흥시의원, 영천시의원, 고령군의원 대상 투기 관련 수사가 전개되고 있다.

계양테크노밸리, 검암역세권, 부천 대장지구 관련 수사도 추진되고 있다. 세종 국가산단 예정지역과 용인반도체 사업 대상지 투기 의혹 등도 수사 대상인 것으로 파악된다.

의혹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공무원, 공공기관 대상 자체 조사, 관련 인사 조치 사례까지 나왔다.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화 등 논의도 이뤄지고 있다.

지난 19일 경찰 수사 대상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경기남부경찰청에 들어서고 있다.

일례로 청와대는 대통령 경호처 직원 1명을 3기 신도시 지역 내 토지 매입과 관련해 대기발령 조치했다. 반면 일부 지자체 등에서는 조사에 반발하는 목소리도 나온다고 전해진다.

투기 등 의혹 수사 범위는 확대될 것으로 관측된다. 합수본은 경찰 신고센터, 경찰 첩보, 관계기관 이첩 등을 광범위한 의혹 관련 정보 취합에 나선 상황이다.

이와 관련, 경찰은 신고센터 접수 제보 50여 건에 대한 정밀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또 서울 등 지역 개발 사업 관련 의혹 정보를 수집하고 투기 외 부동산 범죄 수사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부동산 투기 등 의혹에 관한 특별검사(특검) 도입 논의도 이뤄지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주도적 수사에 대한 자신감과 함께 의혹 규명 속도를 늦추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남구준 국수본부장은 “국수본은 3만명이 넘는 전국 최대의 수사기관으로, 그간 경험과 노하우를 충분히 축적해 왔다고 생각한다”며 “특검 논의와 상관없이 의혹을 명확히 해소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LH 직원 투기 등 부동산 관련 의혹이 이어지면서 민심이 동요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철저한 진상규명 요구와 함께 부당이익 환수 등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시위 등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이날 함께하는 경남시민연합은 LH 투기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단체인 자유연대도 LH 해체, 부당 이익 환수 등을 주장했다.

앞서 농민단체와 시민단체 차원의 LH 투기 관련 규탄 행동도 있었다. 또 시흥·광명 특별관리지역 토지주 비상대책위 등은 신도시 지정 예정지 철회를 요구하는 청원을 내기도 했다.

오유나기자

봄 나들이 21일 오후 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 동물원에서 봄나들이 나온 시민들이 원숭이를 보고 있다.

광주시, 부동산 불법 중개·실거래 띄우기 등 단속

광주시가 23일부터 4월6일까지 5개 자치구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부동산중개업소의 불법 거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실거래가 거짓 신고 ▲자격증 대여와 무등록 중개행위 ▲부동산 중개수수료 초과 요구·징수 ▲중개대상물 인터넷 허위 표시·광고 등이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계도하고, 중대 사항을 위반한 중개업소는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경찰에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현재 무등록 중개행위나 공인중개사 불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기동취재본부

“흡연 이유 학생 폭행·욕설 고교 행정실장 검찰 송치”

아동학대 방조 혐의 교장도 송치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21일 “흡연을 이유로 학생들에게 여러 차례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한 광주 모 고교 행정실장 사건이 검찰에 송치됐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지난해 6월 초 광주 모 고교 행정실장은 ‘3학년 학생 5명이 흡연을 했다’는 이유로 교내 행정실 앞에서 해당 학생들에게 여러 차례 욕설을 했으며, 일부 학생들에게 담배 5~6개비를 입에 물도록 한 뒤 흡연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또 “행정실장은 피 멍들 정도로 학생들에게 폭력을 행사했으며, 이 과정에서 한 학생의 휴대전화가 파손됐다”고 덧붙였다.

시민모임은 해당 행정실장의 폭력행위가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 지난해 11월24일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광주시교육청도 같은 해 12월1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시민모임은 아울러 학교 관리자도 고발했다.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 지방자치단체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하는데 이 같은 신고의무를 이행하거나 긴급임시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시민모임은 “해당 경찰서는 행정실장(아동학대·특수폭행·강요)과 교장(아동학대 방조)의 혐의에 대해 검찰에 송치한다는 수사 결과를 최근 통지했다”고 설명했다.

무면허 음주 추돌사고·운전자 바꿔치기 50대 실형

무면허 음주운전 도중 추돌사고를 내고 친구가 운전한 것처럼 속이려 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10단독 김용민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무면허 운전), 범인도피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장은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친구 B(53·여)씨에게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5일 오후 8시 30분께 광주 광산구 한 도로에서 무면허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01%)을 하다 신호 대기 중인 승용차를 들이받아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음주·무면허 운전 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B씨가 운전을 한 것처럼 교사한 혐의도 받았다.

B씨는 같은 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운전하다 접촉사고를 낸 뒤 경황이 없어 남편과 자리를 바꿔 앉았다’고 거짓말하고, 이러한 내용을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운전자 의견란에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기동취재본부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